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에 관한 일고찰

고영진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은 1946년 11월부터 1949년 초에 걸쳐서 행해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¹을 검토해 보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문맹퇴치는, 북한에서 시행된 최초의 언어정책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풀어진 언어정책의 출발점이라는 데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게다가 북한의 문맹퇴치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행해졌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은 물론 해방 직후 북한이 처해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당시의 북한 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던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원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김하수 1990:143). 그러므로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당시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의 하나를 해명하는 일이자, 동시에 그 이후의 언어정책의 뿌리를 캐들어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1.2 지금까지, 남북한을 막론하고, 북한의 문맹퇴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주체의 언어 이론’을 논의하는 가운데 문맹퇴치를 언급하고 있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0) 및 언어정책사를 점검하는 과정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권승모(1996)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부분적인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문맹퇴치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조선로동당정책사(언어부문)』(1973:79~107)(이하 『정책사』로 줄임), 고 현(1975) 및 전해정(1987)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른바 ‘주체사상’의 등장 이후의 업적들이어서 사실의 ‘기술’보다는 ‘해석’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토대로 북한에서 행해진 문맹퇴치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고영근(1989) 및 이윤표(1991) 등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정책사』의 문맹퇴치 관련 부분을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소개하고 있거나, 정지동(1957)을 요약·정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김하수(1990)은, 문맹퇴치가 박애주의에 입각한 단순한 글 가르치기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운동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나, 아쉽게도 북한의 문맹퇴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문맹퇴치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논의는 이향규(2000:62~79)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당시 북한의 문맹의 현황에서부터 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 등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향규(2000)은 북한의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때문인지, ‘문맹퇴치운동’의 배경이기도 했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데다가, 언어정책적인 면에도 그다지 주목을 돌리고 있지 않다.

1.3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북한의 언어 문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도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자료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실감한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요즘은 북한의 문헌이나 비디오 등의 자료는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역시 살아 있는 언어정책의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맹퇴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해방 직후인 1946년을 전후하여 행해진 탓도 있어서인지, 자료를 찾아 내기가 무척 어렵다. 그동안 남한에서 북한의 언어학과 언어정책에 대한 상당수의 논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맹퇴치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은 북한의 언어정책사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흔적을 더듬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의 문맹퇴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당시 북한

의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가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문맹퇴치의 필요성

2.1 문맹(퇴치)의 개념

일반적으로 문맹이란, “손으로 쓴 것이든 인쇄된 것이든, 단순히 자구(字句)를 읽지 못하는 사람”(チポラ 1969:6)이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보이는 문맹의 개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치폴라는 말한다. 예를 들면, 완전한 문맹과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반문맹’이란 중간의 일군(一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읽을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과 ‘읽고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거나, 자신의 서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チポラ 1969:3). 그렇기 때문에 문맹이란 용어의 정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현상을 평가할 때의 주의깊음과 엄밀함이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チポラ 1969:6~8)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문맹의 정의도 치폴라의 상식적인 정의와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맹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으나, 다음의 정지동(1957:90)은 북한의 문맹퇴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문'자를 모르는 자는 한글 학교에 들어 가서 표음 문'자를 배우게 하였다.(중략) 만약 표음 문'자를 배운 사람이면 신문도 볼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문법만은 그다지 정확하게 되지 못한다.(정지동 1957:90)

윗글의 필자인 정지동은, 문자 개혁의 경험 및 표음 문자 사용 후의 성과와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195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문화 대표단의 일원(정지동 1956:81)이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학교에서 표음 문자(즉, 한글)를 배우기는 했지만, 문법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그의 눈에 비쳐졌는데, 이것은 대단히 예리한

관찰이다. 3~4 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한글로 쓰인 문헌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 기간에 철자법까지도 정확히 익혀 한글(한국어)를 능숙하게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지동의 위의 언급은, 달리 말하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 행해진 문맹퇴치의 목표가 쓰기(혹은 읽고 쓰기 병행)보다는 읽기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당시 북한의 목표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인민들에게서 국가 건설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내기보다는, ‘북조선람시인민위원회’가 내세우고 있던 정책 목표들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그들을 설득·동원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을 없애는것은 민족의 튼성변영, 새 사회 건설의 성과적 추진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며 (중략) 또한 그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글을 가르쳐주는 단순한 《문화계몽사업》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후과를 가셔내고 인민들을 문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숭고한 혁명사업이며 근로인민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고 새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일대 정치사업”(전혜정 1987:5)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맹퇴치는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글을 읽고 쓰는 지식을 배워 신문과 같은 대중출판물을 볼줄 알고 간단한 가감승제의 계산을 하며 일반적인 사회정치지식을 소유하도록 할것”(전혜정 1987:18)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 직후 북한에는 문맹자가 약 230 만 명 정도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250 만이라는 주장² 과 257 만이라는 주장(정지동 1957:89) 등의 이설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30 만 명이라는 주장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2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문맹퇴치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해방 직후 북한이 내건 슬로건은 '식민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으로 대표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비록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아직 국가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은 경쟁적으로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남의 입장에서는 남이 북보다 낫다는 것을, 북의 입장에서는 북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보여야 했던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 그러한 측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식민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이었다.

먼저 1946년 4월 6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김성보 2000:144). 그 결과,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 및 지주의 소유이었던 100만여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어 그 중 78만 1,000여 정보의 토지가 72만 4,000여호의 농가에 무상으로 분여되었다."³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 8시간 노동법령의 실시, 남녀평등법의 실시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그것을 집행할 공식적인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있었을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예컨대, "북조선에 남아 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남조선 반동분자들과의 연계 밑에 공장, 제조소, 광산 기타 산업기관들을 파괴하며 또는 방화하는 등 갖은 발악을 다 하였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법령의 성격과 규정을 외곡하여 허위 선전을 함으로써 민족자본가들과 지어 광범한 소자산계급 내에서까지 불안과 동요를 일으키려고 책동하였"(『조선 통사』, 311 쪽)고, "그들은 또한 인민정권 내부와 농촌위원회 내부에까지 잠입하여 법령을 외곡하며 또는 집행을 태공하는 등 각종 음모와 암해활동을 전개하였"(『조선 통사』, 307 쪽)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개혁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주들이 식민지 치하에서 친일 행위를 한 결과 해방 공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점 및 북한 지역에서의 친일파 숙청 분위기를 피하여 월남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은 채, 비교적 순조롭게 20여일 간이라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성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종석 2000:69). 국유화 조치의 경우는 토지개

혁보다 훨씬 더 순조로웠다. 왜냐하면, “1944 년 통계에 의하면 공업 자본의 5% 만이 조선 사람의 것이었고, 거의 전부가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조선 통사』, 310 쪽)였었으므로, “일제가 꽤망하고 도주한 후 그의 소유였던 일체 기관들은 해방 직후부터 쏘련군대의 보호 하에 각급 인민위원회가 운영 관리하고 있었”던 데다가, “예속자본가들의 세력은 지주계급에 비해서도 훨씬 더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통사』, 311 쪽).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개혁’을 원만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남한과의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계몽하여, ‘민주개혁’에 동참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당시 북한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한 그들의 교육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은 당시 북한 전역을 통틀어 81 개에 지나지 않았다.⁴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에서 문맹퇴치에 눈을 돌린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전국민적으로 되는 군중적으로 되는 건국정신총동원과 사상의식을 개조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김일성 1949:192)한다. 김일성의 이 호소는 나중에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맹퇴치는 바로 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2.3 출발은 문맹퇴치로부터

사회 개혁 및 그것의 공고화를 위한, 이와 같은 문맹퇴치는, 세계 곳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북한만의 예외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문맹퇴치는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기 완성 능력이 있는 것, 인간의 완성은 그가 획득한 지식에 달려 있는 것, 사람들이 계몽되면 될수록, 특히 널리 계몽될수록, 정체(政體)도 보다 완전한 것에 가까워지는 것, 사람들이 계몽되면 될수록, 자유

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보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지식이 전원의 손이 닿는 것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지식을, 그것도 확실한 지식을 인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식을 끝없이 넓히는 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인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阪上 孝編訳 2002:155~156)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국민교육안」(Rabaut Saint-Etienne)에 나오는 표현도 이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특히나 이러한 문맹퇴치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는 더욱더 중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상부구조'의 변혁이 앞서게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산 대중이 변혁의 주체로서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 정치적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김하수 1990:143). 다시 말해, 새로운 사회 이념, 즉 사회주의적 의식의 고양을 위해, 영상 매체나 전파 매체 등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은 언어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글자 배우기'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다(김하수 1990:143). 다음은 북한에서 들고 있는 문맹퇴치의 목적인데, 이것을 보면, 북한의 문맹퇴치도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맹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 대중을 새로운 문화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입할 수 없었으며 모국어의 개화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다(『민족어』, 136 쪽).

첫째로 문맹퇴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식민지시기의 여독을 하루빨리 가시는 투쟁의 합법적적요구로 제기되었기때문이다. (중략) 둘째로 문맹퇴치사업이 해방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 사업을 힘차게 벌리는데서 그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중략) 문맹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문화혁명을 할수 없고 사회주의건설도 할수 없다. (『정책사』, 81~82 쪽)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데, 먼저 "1946년 11월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113호, 1947년 4

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 25 호, 1947 년 11 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 33 호의 발표로서 성인 교육을 위한 학교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문맹퇴치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광범히 전개되게 되었던 것이다.”⁵

그리하여, 당시까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머물고 있던 문맹퇴치에 ‘림시인민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48 년도에는 “해방 이후 북조선에서의 문맹퇴치 총수는 문맹자 총수에 대하여 98% 를 넘으며 잔존문맹자는 139,516 명에 불과”하여, “멀지않아 한사람의 문맹자도 없게 될것이다”(『49 년 연감』, 135 쪽)라는 언급이 나왔고, 실제로 1949 년 초에는 그들의 언명대로 “문맹퇴치사업이 승리적으로 완수”(『정책사』, 105 쪽) 되었던 것이다.

3.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문맹퇴치

3.1 ‘민주개혁’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민주개혁’은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 반제 반봉건 혁명 과제가 어느 정도 완수되고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이종석 2000:7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상잔재는 계속 뿌리깊이 남아있었”고, “또한 소상품 경리가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소부르쵸아적 이데올로기가 광범한 농촌을 지배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계급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조선통사』, 331 쪽).

예를 들어 당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 후에 신설된 ‘농업현물세제’에 따라 납부하게 된 25%의 현물세도 잘 납부되지 않았으며,⁶ 더구나 현물세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의 식량을 잘 내 놓지 않는 풍토도 있었던 듯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애국미헌납운동’을 발기한 것으로 알려진 농민 김제원이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은 북조선의 식량사정을 리해못하고 자기 리익만을 고집하여 방관하는 기색이 남아있”⁷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자신이 직접 “일부분 농민들의 「있는데로 먹고보자」는 옳치 못한 관념과 나쁜인습을 타파해야”(김일성 1949:197) 한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농민들은 당시 북한이 추진하고 있던 '민주개혁'에 대하여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국유화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본인 소유이던 방대한 생산 시설의 소유와 관리는 인민위원회의 거의 모든 간부에게 최초의 경험이었던 데다가, 그들에게는 책임의식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서동만 2005:194). 그리하여 “인민위원회의 사업체계내에는 아직도 관료주의적 유습이 엄중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정권기관내에 아직도 「무사」하게 숨어있는 이색분자들의 계획적 파괴공작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에게 주는 손실이 적지않다”(김일성 1949:190)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각급 인민위원회에는 “아직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일체무책임하고 무능한 관료주의자들과 이색분자”들, 그리고 “아무일도없는 천정만처다 보고앉았는 국가재정만 소비하는 「건달꾼」들로 차있는”(김일성 1949:190) 형편이었다. 일례로, “어떤지방에서는 도인민위원회는 물론이고 군인민위원회에서도 알지못하는 세금을 농민들이 물고있는 현상을 볼수있”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십여종이 넘는 부담을 농민들이 물어야 했으며, 함경북도 같은 데에서는 부담금 종목이 17 내지 22 종이나’ 될 정도였다(김일성 1949:190~191).

게다가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동적 부르주아사상의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었으므로, “인민대중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을 청산하지 않고 또 그들을 사회주의적 사상의식으로 교양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들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당면한 1947년도 인민경제 부흥발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없었”다(『조선 통사』, 331 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식 주권 기관이 아닌,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임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공포·집행한 법률들⁸에 기초한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 시설의 국유화’ 등의 제반 ‘민주개혁’ 조치들은, 아무리 소련군의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언제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3.2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

여기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움직임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소련계의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당 조직을 통한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연안계의 김두봉 등을 중심으로 한 좀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었다(서동만 2005:195). 허가이는 “당내에 숨어 있는 불순분자, 재물을 탐하는 분자들을 숙청하며, 당내의 사상통일을 더 높여서 당대렬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유일당중수여사업’을 추진했다(서동만 2005:196). 그리하여 1946년 겨울부터 47년에 걸쳐 약 4만에서 6만 명의 당원이 당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서동만 2005:197).

그러나 김두봉·최창익·김창만 등의 연안계는, 이와 같은 당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 즉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⁹ 오늘날의 북한 문헌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문맹퇴치운동’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김일성이 발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김일성은 ‘문맹퇴치운동’을 제창하기는 했다. 다음은 ‘1946년 9월 28일 제2차 북조선각도 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선전원문화인 련석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연설 「민주건설의 현재 단과 문화인의 임무」의 일절이다.

문화인여러분은 조선인구의 절대다수가 문맹이라는점에 대하여 고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다수의 문맹자를 가지고있는 민족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속도가 뜰것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가지 문맹때문에 오는 곤난에 봉착하게 될것을 알아야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민족의 수치인 문맹을 퇴치하기위하여 각종방식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는 오늘 조국이 그 문화인에게 지워놓은 중대한 임무입니다.(김일성 1949:157)

위에서 보는 것처럼, 김일성은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던 데다가, 그나마도 문맹퇴치는 ‘문화인들의 임무’라고 그는 보고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1947년 2월 8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성립 제1주

년기념대회에서' 행한 연설인 「조선정치형세에 대한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민들의 양양된 정치적 각성과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하며 진일보한 발전을 전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북조선인민들은 그동안 전인민적으로되는 균중적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일체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낡은 사업방식과 공작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타락적 퇴폐적 악습과 관념을 청산하며 전국민을 고상한 애국적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새조선의 국민으로서 응당 가져야할 새로운 민족적 기풍과 생활태도와 사업태도를 균중적 투쟁으로써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이란 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임으로써 전체 인민들로하여금 조국건설사업에 총동원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김일성 1949:231~232)

비로소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김두봉·최창익 등의 연안계에 의한 정지 작업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두봉은 1946년 11월 28일에 열린 제3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 11월 3일의 김일성의 보고 내용을 체계화한 형태로, 명칭도 새롭게 하여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제창하고 나섰던 것이다(서동만 2005:198). 이 운동은 인민의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하여 선전 부문에 역점이 두어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서동만 2005:200), 거기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선전원'들의 확보 문제였다. 때마침 인민위원회의 선거가 끝난 직후였으므로, 선거를 위하여 조직 동원되어 맹활약을 펼쳤던 '선전원' 조직은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었고,¹⁰ 게다가 선거 기간에 쌓은 그들의 선전선동의 노하우를 무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1946년 11월 3일의 회의에서 '선거선전실'이 '민주선전실'로 개편되어 존속될 것이 결정되었다(서동만 2005:198). 이리하여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본격화하였는데, 이 운동은 북한 최초의 대중운동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문맹퇴치운동', '곡식헌납운동', '생산돌격운동'의 세 개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으며, '사상교양운동'은 '문맹퇴치운동'과 병행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서동만 2005:200).

이 때부터 ‘문맹퇴치운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때는 마침 농한기였던 데다가, 문맹자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으므로,¹¹ ‘림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2월 1일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는 동기농촌문맹퇴치기간”으로 설정하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농촌에서의 ‘문맹퇴치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광섭 1974:48). 그리하여 “농촌민주선전실, 동기농촌문맹퇴치반(한글학교)을 거점으로 하여”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조직운영된 2,780개의 문맹퇴치반에서는 농촌문맹자들이 매일 2시간씩 배웠는데 농맹조직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선전원들을 동원하여 대상의 준비정도에 알맞는 통속적인 각종 제강을 가지고 강연회, 좌담회, 토론회의 형식으로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해석선전사업을 적극 벌리”었던 것이다(고광섭 1974:48).

3.3 ‘리계산운동’

이러한 ‘문맹퇴치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리계산운동’이다.¹² ‘리계산운동’은, 과거에 머슴살이를 하던 강원도의 산골에 사는 리계산이라는 여성이, 토지개혁의 결과로 땅을 분여받고 농사를 짓게 된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1947년의 8월 어느 날 자신이 지은 곡식의 일부를 선물로 가지고 김일성을 찾아간 데에서 짝이 트게 된다. 김일성은, 리계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문맹을 깨친 다음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지시하였다. 고향에 돌아간 리계산은,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읽고 쓰기를 익힌 다음에, 약속대로 석 달 후에는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본 김일성은, 매우 만족하여, 신문에 리계산의 문맹퇴치 경험을 소개하고 널리 선전하여 전국적으로 ‘리계산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였고, 그 결과 ‘문맹퇴치운동’이 전국적인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에게 편지 보내기는 ‘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이향규 2000:77)으로 확대되었는데, 거기에는, 한글을 깨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김일성에 대한 감사의 정 및 앞으로의 각오 등이 표현되어 있다. 아래에 그 한 예를 보인다.

우리들이 캄캄한 문맹의 구렁에서 벗어난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들은 일생을 두고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누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진정한 벗이며 누가 우리 민족의 원수인가를 분별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환히 뜬 눈으로 조국의 빛나는 앞날을 내다보고 종래보다 몇 배의 열성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배를 짜겠습니다. 당신이 지도하시는데로 배우며 일하며 또 싸우겠습니다.¹³

이와 같이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는 방법'(고광섭 1974:77)은 북한에서 벌이는 운동 형태의 한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절박한 연료난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1947년 1월에는 '창발적애국운동'을 일으켰으며(고광섭 1974:33), "절박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군중적인 '애국미헌납운동'(고광섭 1974:50)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운동은 북한에서 주민을 조직·동원하는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른바 '군중로선'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어, '대안의 사업 체계'라든가 '천리마운동' 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북한의 주민 동원 방식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4 '(립시)인민위원회'의 주도

그런데 문맹퇴치에 필요한 제도적·물질적 문제들은 국가적인 후원이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및 강사의 문제에서 교과서와 학용품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당시로서는 국가적 후원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립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에는 '문맹퇴치운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민족어』, 136~137쪽)하였고, 1947년도와 1948년도에는

‘문맹퇴치 돌격 주간’을 설정하는 등¹⁴ 본격적으로 문맹퇴치에 나서게 된다.

우선 학교의 문제는 한글학교의 본격적인 이용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¹⁵는, 1947년 4월 8일에 ‘한글 학교 규정’ ‘성인 학교 규정’ ‘성인 중학교 규정’을 발표하여 성인 교육의 체계를 쇄신 확립하고, 종래의 성인학교를 한글학교로, 특수 학교를 성인학교와 성인중학교로 개편 정리¹⁶하는 등의 체계를 정비하였다(『49년 연감』, 135쪽). 이에 따라 1946년 9월 현재 9,262 교에 불과하던 한글학교는 ‘문맹퇴치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인 1947년 11월말 경에는 무려 29,494 교에 달하게 되었다(『49년 연감』, 134~135쪽).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강사의 문제였다. 학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집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거기를 교실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밭머리 학습’ ‘논머리 학습’처럼, “무더운 여름철에 농산작업을 하다가 밭머리와 논머리에서 휴식 참을 리용하여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전혜정 1987:86) 것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해방 직후인 당시에는, 남북을 막론하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정규 학교에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예컨대 당시 남한에서도 국어 교사가 너무 모자라서 조선어 학회의 한글 강습회에 ‘사범부’를 두고 ‘한글 문화 보급회’의 사무 협조를 받아 고작 2~3주의 강습 정도로 국어 교사를 배출해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¹⁷ 이러한 사정은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초등 교육 기관인 인민학교의 교원 수는 1946년에는 18,505 명이었는데, 1947 학년도 초에는 23,315 명으로, 그리고 1948년 9월에는 24,600 여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49년 연감』, 130쪽). 이로 미루어 당시 북한에서도 교원의 양성 과정은 남한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¹⁸

북한에서 “한글학교의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 선발과 배치 사업을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맡아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모자라는 강사는 매 개 군에 문맹퇴치강사양성소를 설치하고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혼자서도 충당하도록 하였다”(전혜정 1987:40)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교육일군이 아니라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정도의 초보적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강사로 될수 있었”(전혜정

1987:63)는데, 왜냐하면 “문맹퇴치사업은 정규학교의 교육과 같이 오랜 기간을 요구하거나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교육내용도 비교적 간단”(전혜정 1987:63)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족간부가 매우 부족했던”(『정책사』, 89 쪽)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각급 학교의 교원들은 물론 각 정당, 사회단체, 문화기관의 지식인들, 가두녀맹원들 가운데서 적임자를 찾아내어 강사로 등용”(전혜정 1987:63) 함과 동시에,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각급 학교학생들을 많이 동원”(전혜정 1987:64)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학교의 높은 학년” 및 심지어는 “인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문맹자들에게 글을 배워주려고 떨쳐나”(전혜정 1987:67) 서게 함으로써 부족한 강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결과, “문맹퇴치사업이 진행된 전기간 이 사업에 동원된 학생 인원수는 연 2 천 3 백여만명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문맹퇴치사업에 동원된 연 인원수 3 천 4 백 3 십여만명에 비해볼 때 무려 67% 나 된다”고 한다(전혜정 1987:68).

문맹퇴치 과정에서 당시 북한이 맞닥뜨렸던 또 하나의 난제는 교과서의 문제였다.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인쇄 및 출판과 관련한 기술적·물질적인 문제는 물론, 사용 문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용 문자를 한글로 했을 때의 규범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게다가 교재의 내용과 그것을 집필·편집할 인재들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기술적·물질적 문제 및 교재의 편찬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림시] 인민위원회’)가 간여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즉, ‘(림시)인민위원회’는 “한글학교운영에 필요한 교과서도 국가가 유일적으로 편찬출판하여 보장해 주도록 하였”고, “문맹퇴치용 교과서 출판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원과 학자, 작가들을 광범히 인입하여 국가적인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가 제때에 출판인쇄되도록 필요한 인쇄능력도 확보하여” 주었던 것이다(전혜정 1987:41). 『49년 연감』(131 쪽)에 따르면, “교과서의 발간 사업은 1946 년도의 430 만부에 뒤이어 모든 장애를 극복하여 고상한 사상성과 선진과학지식으로 각급학교의 교과서 109 종 약 160 만부를 발간배부하였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47년 현재의 학생수는 인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1,621,141명이었다고 하므로 (『49년 연감』, 127쪽), 각 과목별로 교과서가 몇 권씩이었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약 3.64권씩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무척 궁핍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양호한 숫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신문에 교재를 런재하여 「지상교재」를 내보내는 방법” 혹은 “일부 지방들에서는 자체로 국가의 유일교재를 복사하여 「등사교재」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전혜정 1987:41).

이 밖에, 당시는 남북의 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웠었으므로, 남한에서 간행된 것들도 꽤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이회승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를 기초로 하여 엮은 길용진의 『1946년 9월 8일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설』(1947)이 ‘북 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검열과 심사 번호 제 62호’로 간행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일러두기」에는 “조선 사람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바로 쓰는 것으로 첫 의무, 첫 자랑, 존경받을 첫 자격을 삼을 것이요. 우리 말과 글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첫 수치, 첫 죄악을 삼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책도 문맹 퇴치 과정에서 교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¹⁹

또한 길용진 엮음(1947)이 ‘임시인민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은, 당시 북한의 언어 규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즉, 문맹퇴치와 관련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어떤 규범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북한에서도 조선어학회가 1946년 9월 8일에 개정한 ‘통일안’을 이용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자 폐지’도 문맹퇴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자의 사용까지 전제로 했을 때에는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맹을 없애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자 사용의 폐지는 문맹 퇴치 사업이나 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로서 “한’자가 폐지되고 국문 글’자로만 문’자 생활이 보장된다는 조건 밑에서만 국문 글’자를 가르쳐서 문맹 퇴치를 한 것이 보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민족어』 143쪽).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문

맹퇴치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자가 폐지되었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문'자 생활의 대중화”(『민족어』, 140~141 쪽)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자가 폐지됨으로써 북한에서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대중에게 신속히 침투될 수 있게 되었고, 또 대중이 옳은 교양을 받을 수 있게 되’(『민족어』, 140~141 쪽)어, 문맹퇴치는 애초에 내세웠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3.5 문맹퇴치의 완수 및 재교육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북조선로동당인민위원회) 주도’로, 1946 년에서 1948 년도까지 진행한 결과, 1949 년 초 무렵에는 문맹을 거의 완전하게 퇴치하였다. 이것은 『49 년 연감』(135 쪽)에 “이상에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북조선에서의 문맹퇴치 총수는 문맹자 총수에 대하여 98% 를 넘으며 잔존 문맹자는 139,516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잔존문맹자의 퇴치와 더불어, 문맹퇴치자에 대한 재교육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48 년 12 월 1 일부터 1949 년 3 월 말까지를 ‘잔존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 돌격 기간’으로 설정하고, 남은 문맹자에 대한 교육과, 문맹퇴치자에 대한 재교육을 병행하게 된다(전혜정 1987:110). 그러나 “마지막단계에 문맹자들이 매우 분산되어있었고 남은 이 시기의 남은 문맹자들의 대부분이 완고한 나이 많은 늙은이거나 여성들이었기 때문”(전혜정 1987:11)에, 이 과정에서 북한이 힘을 쏟은 것은 잔존문맹자의 퇴치보다도 오히려 재교육 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키워 놓은 문맹퇴치자들을 그대로 팽개쳐 두었을 때에는, 특히나 그들 중에는 성인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다시 문맹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재교육은,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배운 글을 익히고, 새 지식을 습득하며, 더 나아가서는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전혜정 1987:100).

이에 따라 1947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 25 호에 의하여 성인 교육 체계가 확립(『49년 연감』, 135 쪽)되어,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이 본격화하게 된다. 우선 문맹자들이 배우는 한글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성인학교로, 성인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성인중학교 또는 기타 학교에 진학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49년 연감』, 135 쪽). 성인중학교²⁰는 2년제 및 3년제가 있었는데,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정규 학교의 졸업생들과 똑같은 자격을 주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했다(전혜정 1987:104~105).²¹ 이 밖에 속성성인학교도 있었는데, 이것은 1948년까지 퇴치된 약 200 만명에 이르는 문맹퇴치자(한글학교 수료자)들을 위한 학교로서, 짧은 기간 안에 인민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정치적 기술적 기초 교육을 위하여 세운 학교였다(『49년 연감』, 136 쪽). 이 학교는, 문맹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성인중학교처럼 2년 혹은 3년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 1년을 4개월씩 3기로 나눈 다음에, 각각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나누어 교육함으로써(『49년 연감』 136 쪽), 문맹을 퇴치한 사람들 모두가 초등 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전혜정 1987:108).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인민과적 성격을 띤 종합 교과서’를 주 과목으로 한 ‘산수 과목’과 ‘정치 교양’이었다고 한다.²²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인민의 역량을 키우고, 인민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완전독립의 날을 앞당기’(김일성 1949:187)고자 했고, 실제로 그 성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문맹퇴치의 결과

4.0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수한 문맹퇴치는 북한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 장에서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문맹 퇴치의 성과적 완수는 학교에서의 모국어 교육과 함께 대중의 문화 계몽 사업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였으며 이것은 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와 조선어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민족어』, 137 쪽)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4.1 사회정치적 측면

문맹 퇴치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들을 낡은 사회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고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지식과 정신 생활을 새롭고 풍부하게 하여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민족어』, 138 쪽).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과) 문맹 퇴치 사업의 결과로써 전체 인민이 서사 생활과 독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전체 인민이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자유로이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의의의 첫째로 들고 있다(『민족어』, 138~139 쪽). 즉, 문맹 퇴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일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의 진보적 인류가 달성한 과학과 기술의 모든 성과를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의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민들 속에서 새로운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민족어』, 139 쪽)는 것이다.

위와 같은 표현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실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예가 제시된 적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있다. 1957년 말부터 1958년 11월까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집필했다는 김일출(1959)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논문은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를 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문맹퇴치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문맹퇴치와 관련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간단히 관련 부분을 소개하기로 한다.²³

먼저 ‘전체 인민이 독서 생활과 학습’은 어떠했는지를 보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각 조합에서 운영하는 민주 선전실과 조합안의 민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합에는 농촌에 적합한 서적들과 신

문 잡지들이 비치되어 조합원들의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김일출 1959:19), 예를 들어 황남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조합원 1,350명)에서는 로동 신문 28부, 황남 일보 48부, 농민 신문 50부를 포함한 각종 신문 190부 및 도 근로자 선동원 수첩을 위시한 각종 잡지 279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지방 서점을 통하여 각종 신간 도서도 월 평균 50부 정도 구입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김일출 1959:20~21). 그리고 “각 조합원들은 남녀 로소를 막론하고 정치 문화와 국내의 시사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들 신문을 읽고 학습하고 있는데, 로동 신문은 작업반별 당 단체 학습에 사용되고 있으며, 황남 일보는 각 작업반에 한 부씩 비치되어 작업반별 시사 독보회에 리용되고 있다.”(김일출 1959:21)

또한 조합원들 가운데에는 선동원들도 112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은 군에서 월 2회, 리 당에서 월 2회의 썬미날에 참가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를 조합원 대중들 사이에 침투시키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일출 1959:21). 게다가 이들 조합원들은 월 1회의 조합원 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작업반 협의회 및 작업 반장이 강사로 되는 작업반별 학습에도 월 2~3회 참가한다(김일출 1959:21). 그들은 이러한 “회의와 학습을 통하여 조합의 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며 생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창발적인 의견들을 토론하며, 또 생산과 밀접하게 결부된 생생한 지식들을 습득한다.”(김일출 1959:21)

학습의 내용은, 위와 같은 ‘생산과 밀접하게 결부된 생생한 지식’만이 아니라, ‘당사’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예컨대 평남 순안군 사직 2 농업 협동 조합에는 관리 위원회 건물 안에 ‘조선 로당당 투쟁 력사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실에는 김일출 선집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문헌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의 독서 및 학습을 돕고 있다(김일출 1959:19). “이 연구실을 이용한 독서는 작업과 계절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나, 청년들을 선두로 전체 조합원들이 이 연구실을 리용하며, 민청, 민주 선전실의 도서를 리용하는 틀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현상”(김일출 1959:19)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여전히 문맹퇴치자를 위한 재교육도 실행되고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평남 순안군 상양 농업 협동 조합의 조합원 가운데에는 “근로자들에

계 인민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주기 위한 2년 제의 학교”(『조선말 사전』, 467쪽)인 근로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160명이 있는 바, 이 근로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문을 해독하는 정도로부터 인민학교 3~4년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16~50세의 성인들이었다(김일출 1959:20).

4.2 언어정책적 측면

위와 같은 사회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정책적인 면에서의 손질도 불가피했다. 우선 문맹퇴치의 내용이 한글의 읽고 쓰기와 간단한 가감승제였으므로, 그 때까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던 한자의 폐지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한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문맹퇴치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몇몇 전문 서적에서는 한자를 노출했지만, 그 밖의 서적이거나 신문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용하는 식으로 하다가, 1949년부터는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²⁴

한자의 폐지는 또다른 문제를 가져 오게 된다. 즉,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운 한자어는 물론, 일본어의 이른바 ‘훈독 한자어’를 조선어식으로 음독한 한자어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시기 조선어 가운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 통치와 일제 식민지 통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리해하기 어려운 한자 어휘와 외래 어휘가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 대중이 당 정책을 연구하며 자유롭게 기술 문화를 습득할 수 없으며 조선어 그 자체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발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민족어』, 153쪽).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이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언어정화’로 구체화되며, 60년대 이후에는 ‘어휘정리’라는 이름 하에 대대적인 ‘언어순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들은 또한 어휘 규범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규범의 정비로도 이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휘 규범은 사전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사전의 편찬은 또한 철자법 규범의 정비를 필요로 하며, 철자법은 또한 규범 문법의 손질과 궤를 같이 한다. 그렇

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조선어 교육과) 문맹 퇴치는 조선어의 규범화를 촉진시키기에 있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광범한 인민 교육의 전개는 교수 사업과 교과서의 편찬에서 조선어 표준어의 더 한층의 규범화와 광범한 보급을 가져 왔으며 철자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발음 및 문법 규칙의 작성, 학술 용어의 통일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게 하였다”(『민족어』, 138 쪽)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의 폐지와 한자어의 정리는 문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한자를 폐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쉽게 정리하는 것은 문장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문풍(文風) 개선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문풍이란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수법이나 태도”(『조선말 사전』, 1504 쪽)이므로, 어휘 차원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풍 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출판물에서 “당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한다”(『민족어』, 174 쪽)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출판물의 형식과 내용을 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하게 하며,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²⁵ 라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씀으로써 좀더 쉽게 그들을 설득·동원하고자 했던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맺는 말

5.0 지금까지 우리는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6년 11월부터 1949년 초에 걸쳐 북한에서 일어났던 ‘문맹퇴치운동’을 검토해 보았다. 문맹퇴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박애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실은 그것은 사회적·정치적 운동의 하나라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북한에서, 전 국가적으로, 가용 자원을 전부 동원하여, 한글의 읽고 쓰기(및 간단한 가감승제)를 가르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은, 문맹퇴치가 갖는 이러한 성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제 본론에서 논의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5.1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은, 초창기에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나, 1946년 11월 무렵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운동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당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북조선(림시) 인민위원회'는 문맹퇴치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기술적 원조는 물론, 강사 문제의 해결에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이것은 물론, 문맹자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49년 초 무렵에는, 230만에 이르던 문맹자들이 거의 퇴치되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맹의 퇴치에만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즉, 성인들의 문맹을 없애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 모두를 초등 학교 졸업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역군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들 재교육자들에게도, 정규 학교의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5.2 문맹퇴치의 결과, 인민들은 『로동 신문』을 비롯한 신문·잡지를 구독하는 것은 물론, 김일성 선집이나 맑스-레닌주의 문헌까지도 학습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습득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였음도 확인하였다. 언어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맹퇴치의 영향은 지대했다. 문맹퇴치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선 한자가 폐지되었고, 그것은 '언어정화' 및 60년대의 '어휘정리'로 이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제반 언어정책들은 규범의 정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문풍 개선 사업'을 통하여 출판물의 대중화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은 보기 좋게 성공한 셈이다.

5.3 그러나 문맹퇴치가 이후의 북한의 언어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지나치게 간략하게 다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화하여, 그 실제 모습은 어떠했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남아 있다.

주

- 1 최근 한국에서는 ‘문맹’이란 말이 가지는 차별적 뉘앙스 때문에 ‘비문해(非文解)’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이향규 2000:62).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북한의 그것에 따라 ‘문맹, 문맹퇴치’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1962),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 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 출판사, 136 쪽. 이하 『민족어』로 약칭함.
- 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58), 조선 통사(하), (서울: 일송정 재발간, 1989), 308 쪽. 이하 『조선 통사』로 약칭함.
- 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195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통계집, 국립 출판사, 156 쪽 참조. 이하 『통계집』으로 약칭함. 이 밖의 문화 시설로는 구락부가 91 개소, 도서관이 35 개소, 박물관이 2 개소 정도였다(『통계집』, 156 쪽).
- 5 『조선 중앙 연감(국내편)』(1949), 134 쪽 참조. 이하 이 책은 『49년 연감』으로 약칭함.
- 6 예컨대 농업현물세는 1946년 11월 현재 60% 밖에 납부되지 않아 국가 재정에 많은 곤란을 가져 오고 있다고 김일성이 직접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김일성 1949:200).
- 7 고험(1974:50)에서 재인용.
- 8 북한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선우 몽령(1958:44)은 1947년 2월에 개최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대회’에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표 실시한 모든 법령을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이로써 이때까지의 모든 법령들은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 9 서동만(2005:198) 참조. 이 절에서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관한 논의는, 서동만(2005:198~205)를 토대로 하여, ‘문맹퇴치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필자가 약간 보충한 것이다.
- 10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이번선거사업에 있어서 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야하며 그들의 선거승리를 위한 투쟁은 실로 영웅적거동이었으며 우리 건국사상에 길이 빛날것입니다.”(김일성 1949:188)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 11 전해정(1987:80)에 따르면, 주민의 80%가 농민이었으며, 농민의 90%가 문맹이었다고 한다.
- 12 이하의 ‘리계산운동’과 관련한 것은 전적으로 전해정(1987:59~60) 및 『정책사』(99~101 쪽)에 의존하였다.
- 13 이향규(2000:78)에서 재인용. 이향규(2000:78)에 의하면, 이 편지는 1955년

- 에 교육도서출판사에서 간행된 『해방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47 쪽)에 실린 것이라고 한다.
- 14 제 1기 '문맹퇴치 돌격 기간'은 1947년 12월 1일부터 1948년 3월 31일까지였고, 제 2기 '문맹퇴치 돌격 기간'은 1948년 12월 1일부터 1949년 3월 31일까지였다(『민족어』, 137 쪽).
- 15 1947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3일의 선거에 의하여 뽑힌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림시'라는 말을 떼어 버린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된다(이종석 2000:71~71).
- 16 전해정(1987:34)에 따르면, 1947년 4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 25호에 따라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한글학교라 부르도록 하였고, 한글학교를 마친 성인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학교는 학년제에 따라 '성인학교'(2년제), '성인중학교'(3년제)라고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 17 이응호(1973:207) 참조. 이렇게 하여 배출된 국어 교사의 수는 1,836명이었다고 이응호(1973:207)는 말한다.
- 18 당시 북한에서는 간부 양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양성소를 세웠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중등교육간부양성소를 위시하여 각 도에 동등의 양성소가 있"(『49년 연감』, 131 쪽)었던 바, "이 양성기관들은 3개월 내외로부터 2년여에 걸친 수확제를 가지고 있"(『49년 연감』, 130 쪽)었다고 한다.
- 19 이 밖에 공책과 연필 등의 학용품의 보급에도 무척 신경을 썼던 흔적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해정(1987:42)은 "우리 나라에서는 당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나 문맹퇴치사업에 필요한 교구 비품과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으며,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문맹퇴치사업에 필요되는 학용품들과 교구비품들을 국가계획위원회와 합의하여 생산계획에 맞물리도록 하였으며 생산품들은 국가상업망을 통하여 문맹자들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20 성인중학교는, 그 명칭이 처음에는 성인특수학교였는데, 1947년에 들어 성인중학교로 개편되었다(『49년 연감』, 135 쪽).
- 21 1947년의 경우에 성인중학교는 95개교에 학생수가 11,098명이었다(『49년 연감』, 136 쪽).
- 22 『49년 연감』, 136 쪽 참조. 그리고 1948년 7월 31일 현재 '속성성인학교'는 모두 21,434개교가 있었고, 학생수는 252,304명이었다(『49년 연감』, 136 쪽).
- 23 이 절에서의 이하의 논의는 김일출(1959:19~21)을 토대로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 24 북한에서 한자를 완전히 폐지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민족어』(140 쪽)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1949년부터 한자를 폐지했다고 하고 있고, 전해정(1987:121)은 "문맹퇴치사업이 마감되던 1949년 3월에는 한자를 폐지하고 모든 출판물과 국가공문서들에서 한자사용을 완전히 금지

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사』(128 쪽)에는 “1949년 초에 이르러서는 특수한 일부 출판물을 내놓고는 대부분의 출판물들에서 한자를 기본적으로 다 버리게 되었”으나, “1949년 말부터는 한자사용의 폐지를 철저하게 마감짓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했다는 진술이 있다. 실제로도 대중적인 계몽지였던 『말과 글』의 1959년 1호에도 일부 괄호 안에 한자가 보이는 데 [예: 성어(成語), 리두(吏讀), 국문(國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한 한자 폐지’는 1949년 3월보다는 훨씬 나중의 일일 것이다.

25 『민족어』, 174 쪽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 고광섭(197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중적에 국운동으로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력사과학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pp.25~78.
- 고영근(1989), “북한의 언어정책”, 고영근 편(1989:13~41).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 현(197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맹을 퇴치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 언어학론문집 1, 사회과학출판사, pp.227~250.
- 권승모(1996), “조선로동당의 언어정책과 그 빛나는 실현”, 김영황·권승모 편(1996: 3~51).
- 길용진 엮음(1947), 1946년 9월 8일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설, 조선출판사.
-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2, 녹진.
- 김성보(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 김영황·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 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김일성(1949),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 제 1권, 국립인민출판사.
- 김일성(1949), “문맹퇴치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김일성전집 8(1994:35~4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출(1959), “농촌 근로자들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 풍습에 관하여”, 민속학 논문집, 과학원 출판사, pp.1~26.
- 김하수(1990), “북한의 국어정책”, 우리 교육 1990년 9월호, pp.142~147.
- 김형찬 편(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박수영(1985),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0),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의 발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조선 통사 (하), (서울: 일송정 재발간, 1989).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도서출판 선인.
- 선우 동령 (1958), 인민 정권의 수립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조선 로동당 출판사.
- 이운표 (1991), “북한의 국어순화사”, 김민수 편 (1991:33~56).
- 이응호 (1974), 미 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성철사.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항규 (2000),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혜정 (1987), 문맹퇴치경험, 사회과학출판사.
- 정지동 (1956), “조선의 문'자 개혁 (1)”, 조선 어문 1956년 6호 (박준영 역), pp.81~89.
- 정지동 (1957), “조선의 문'자 개혁 (2)”, 조선 어문 1957년 1호 (박준영 역), pp.89~96.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 (1962),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 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 출판사.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 (195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통계집, 국립 출판사.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 연구실 (1962),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 조선 중앙 연감 (국내편), 1949
- 조선로동당정책사 언어부문,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코·ヨンジン (2002), 「草創期の北朝鮮における言語政策と辞典編纂」、『言語文化』第3巻第3号, pp.703 ~ 746.
- 阪上 孝編訳 (2002), フランス革命期の公教育論, 岩波書店.
- チポラ (Cipolla, Carlo M.)(1969), 読み書きの社会史、お茶の水書房 (佐田玄治訳, 1983).

獨立直後の北朝鮮における「識字運動」に関する一考察

A Study of Literacy Movement in North Korea(1946 ~ 1949)

코·ヨンジン(KO, Young-jin)

本稿は、1946年11月から1949年初にかけて行われた北朝鮮の「識字運動」

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識字運動は、北朝鮮最初の言語政策でありかつそれ以降の言語政策の出発点であるため、その意義は非常に大きい。

識字運動は「社会的・政治的」運動の一形態であるが、それは北朝鮮においても同じであった。即ち、北朝鮮では全国的な次元で識字運動に取り組んだのである。これは識字運動が「建国思想総動員運動」の一環として進められたことからまず理解できるだろう。「建国思想総動員運動」が起ると、当時政府の役割をしていた「北朝鮮（臨時）人民委員会」は識字運動に必要なあらゆる物資や技術の援助は勿論のこと、講師や教科書の問題まで、すべてを保証してくれた。これは文字を知らない人々にハングルの読み書きや加減乗除を教えることにより、かれらを「反帝反封建革命」に参加させるためであった。その結果、1949年の初め頃には230万名に至っていた非識字者の殆んどがハングルの読み書き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識字運動が終わってから、人民たちは「労働新聞」をはじめ、金日成選集や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文献を学ぶことに留まらず、国家の政策についても勉強し、それに理解を示すようになった。言語政策の面においても識字運動の影響は大きかった。識字の成果を確固たるものにするため、まず漢字が廃止され、それはまた「言語浄化」および規範の整備にまで繋がったのである。結局、北朝鮮の識字運動は見事に成功を収めたと言えるだろう。

Keywords: Literacy Movement, Language Planning, Anti-Imperialism
Revolution, Anti-Feudalism Revolution